

# 정치권 “박근혜,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해야”

민주·국민·바른·정의당 “사과가 순리”

한국당 “재판 공정해야”…공식논평은 없어

국정농단 파문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린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비판하며 대국민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15가지 혐의로 구속된 지 53일만에 첫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불

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말씀을 하지 않은 제 범죄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첫 재판장에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술한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공정하게 이뤄져 국민과 역사에 규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했던 것은 국민의 힘이었고, 바로 그 힘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정당은 23일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밝혔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을 보며 한마디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국가적 불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른정당은 국민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을 담담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에도 조급의 반성도 없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뻔뻔함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설마 했는데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이 한 해명이라고는 영원없는 발뺌뿐이었다”며 “이미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가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까지 순박하게 하늘을 가리려 드는 전직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진 국민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국민기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착잡한 기류를 감추지 못했다.

당에서 배출한 직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오자마자 구속돼 형사재판까지 받는 장면에 다른 당과 달리 공식논평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다만,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김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통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현정의 불행이고 재현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대행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만 드린다”면서 “사법부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암울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특검 수사와는 달리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계를 포함한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이날 TV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체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진동원

## 박근혜 10월께 1심 선고…재판 집중 ‘속도전’

뇌물 증인신문·직권남용 서류증거 조사 ‘투트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간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기간은 산입하

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 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연기될 위기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

령과 최씨의 뇌물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도금 등 직

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 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일부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가 피해를 봤다고 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김 전 실장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향후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비밀을 넘긴 혐의도 ‘대국민답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요청 외에는 (문건유출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 김동철 “박 전 대통령, 역사 앞에 참회해야”

“분권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마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분권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나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변화의 열망에 허락할 줄리일지 자질을 겸증할 것”이라며 “도덕성 겸증도 피할 수 없

다. 후보자 스스로 국민에게 소명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제인 대통령이 프라치스코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잊기 힘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긴박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논란거리가 되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안보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 돌출적인 정상회담 언급은 한미 갈등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소를 묻는 말에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에 “그렇다”고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박근혜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직업은?” 질문에 “무직입니다”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개정선언을 한 뒤 법정 앞 대기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입장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에 들어와 재판부 오른편 피고인석에 앉았다.

담당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에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에 “그렇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들은 뒤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최순실씨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을 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인적사항 확인에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재판 50분 전인 오전 9시 10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감색 상복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것처럼 뒷머리를 머리집개로 고정했지만,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 짹게 한숨을 쉬는 것에 그의 불편한 심경이

재판에 착잡한 기류를 감추지 못했다.

당에서 배출한 직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오자마자 구속돼 형사재판까지 받는 장면에 다른 당과 달리 공식논평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다만,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김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의 모두발언 통해 “전직 대통령이 한 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현정의 불행이고 재현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대행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만 드린다”면서 “사법부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암울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특검 수사와는 달리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계를 포함한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이날 TV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체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잊기 힘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긴박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논란거리가 되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안보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 돌출적인 정상회담 언급은 한미 갈등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그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 일어선 후 재판부를 향해 답변했고, 그 외에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거나 의사 표명을 하거나 몸을 유지하듯 올리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가끔 시선을 위쪽으로 향하거나 고개를 젓거나 물을 따라 마시는 것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띠는 행동이 없었다. 아무 예도 하지 않았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 짹게 한숨을 쉬는 것에 그의 불편한 심경이

/연합뉴스